평화당 비당권파 10명 전원 탈당키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제3지대 신당 구축' 결의 탈당 결행은 12일 오전 예정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8일 평화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 구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결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분당'(分黨) 수순을 밝는 것이다. 다만 당권파인 정동영 대표와의 추가 협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어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당권파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주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다"며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 전원이 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현재 소속 국회의원 14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장정숙 의원까지 16명이다.

이 가운데 대안정치에 속한 의원은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유 원내대표는 "창당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그러나 '제3지대 신당'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당원 여러분도 동의해주실 것이라 본다"고 했다.

평화당은 최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놓고 '당내 기구를 통해 제3지대를 모색해야 한다'를 당권파와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즉각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당권파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빚어왔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함께 하자'는 거듭된 제안을 끝내 거부했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제3지대 신당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이를 당권 투쟁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의도의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대안정치가 변화와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념을 떠나 민생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새 인물을 만나겠다. 저희 의원들 모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희망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탈당을 결의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진로와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국회 소모품 4개 중 1개가 일본제품"

평화당 김광수 의원, "점검·실태조사 필요"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불복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4개중 1개에 해당하는 제품이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회 및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소모품에 대해 점검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8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의원실 소모품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의원실 당 분기별로 구매할 수 있는 소모품은 총 102개로 그 중 일본제품은 24개(23.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4개 일본제품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후지제록스 토너 8종 △드럼 2종 △스테이플러 2종, △캐논 프린터 토너 1종 △미쯔비시 유니볼시그노 중성펜 3종 △제트스트림 4색 볼펜 1종 △펜텔 샤프 1종 △지우개 1종 △형광펜 5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일본제품 24개 품목 가운데 프린터, 복합기 등 이미 구매한 제품의 토너, 드럼, 잉크 등 소모품의 경우는 배제하더라도, 볼펜, 샤프, 지우개 등 사무용품의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 정부는 7월 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며 "특히,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일 경제전쟁 국면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가 이미 구매한 제품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한 볼펜, 샤프, 지우개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향후 소모품 신청 시 대체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日 조치는 대법원 판결 경제 보복"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日, 자유무역 혜택 가장 많이 본 나라… 수출규제 이율배반 경제 체질·산업생태계 개선 새롭게 도약할 계기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본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놨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 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승우 도의원, 日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전북도의회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과 관련,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조례를 추진중인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 착취와 자원들을 수탈하였을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보복조치를 감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도의원 전체 발의로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서 언급한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12일 발표

당정이 오는 12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날 오후 2시께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뉴시스